

# '5인 이상 집합 금지' 첫날, 체념한 상인들

### 수도권, 식당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 사적모임 대상...동창회·송년회 등

### 상인들 "집합금지, 달라지는 것 없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 명대를 웃도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등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23일 0시를 기해 시행됐다.

상당수 상인들은 이같은 조치에 체념한 듯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시기를 놓쳐 코로나19도 완전히 잡지 못했고, 이미 매출은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의 5인 이상 실내·외 사적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5인 이상의 사적모임 대상으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이 금지된다.

사적 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 등이 해당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취식 등 마스크를 벗을 수 밖에 없는 식당이나 모임·행사 인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영화관,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취약하다"며 "사전예약제(4인 이하), 이용인원 기재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역수칙 추가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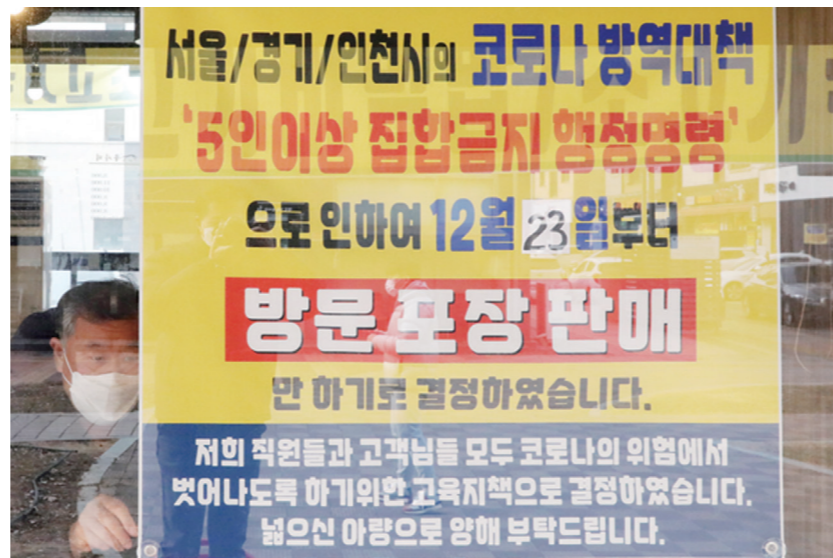
이를 바라보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당사자들의 반응은 반발이나 우려보다는 '체념'에 가깝다. "이미 (방역 조치)가 늦었다"는 것이다.

뉴시스가 전한 서울의 대표적인 변화인 중구 명동거리와 종로구 대학로 등에서 상인들을 만나봤지만, 이들 대부분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 대한 기대감을 없다는 취지로 입을 모았다.

명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A씨는 "(집합금지가) 마음에 안 든다. 방역 기준을 5인 이상 금지로 바꾼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집합금지 이전부터 이미 다 4인 자리로 띄워놓고, 전·후·좌·우 한 칸씩 띄어 앉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점심 시간에도 손님이 4명밖에 안 왔다"며 "차라리 한 대 세계 맞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한 대 때리고 또 일어날만하면 다시 때리는 정부 정책이 1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초기에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해서 확실하게 잡았어야 하는데, 정부의 정치적 고려로 조절하면서 지금은 코로나19를 뿌리 뽑을 수 없게 됐다"며 "코로나19는 접촉을 막는 게 유일한 해결책인데 거리두기를 점점 풀고 하다보니 결국 지금 상황에 온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수도권에서 5명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되는 23일 오전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음식점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방문 포장 판매만 한다는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다.

명동에 위치한 다른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 B씨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정말 셀 수 없이 손님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다"며 "일하는 직원도 원래 4명이었는데 사장님이 저 말고는 다 그만두게 했다"고 말했다.

B씨는 "단체손님이 안 온지가 하도 오래 돼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최근에 (손님이) 가장 많이 온 날이 7명이었다"고 했다.

대학로의 한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 C씨도 "거리두기 2.5단계 이후 단체 예약은 하나도 없다. 지금 매출 임대료 감당하기도 벅찬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배달하는 양이 늘었다고 해도 배달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남는 것도 없다"고 전했다.

C씨는 "집합금지가 5인 이상이면 안 된다는 것인데, 6명이 와서 일행이

아닌 척 4명·2명으로 나눠 앉겠다는 손님들도 있고 5인도 가족이면 괜찮지 않냐고 물어보는 손님들도 있다"며 "우리가 5명 이상이 와서 4명씩 나눠 앉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관련 방침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에 이어 정부도 오는 24일부터 식당 등 5인 이상의 예약을 금지하는 특수방역대책을 시행한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는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 회식, 파티 등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같은 정부 조치는 24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완화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서선욱기자

### 고교생 17명 탄 통학버스, 화물차 추돌...학생 4명 경상

23일 낮 12시 35분께 광주 광산구 진곡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고등학교 통학 버스가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 17명 가운데 4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통학버스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광양소방서, 소방관과 랜선으로 만나는 교육영상 공모

전남소방본부 광양소방서(서장 송태현)는 겨울철 기간 동안 비대면 교육 체험 영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안전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가족과 함께 응급·재난상황에 대처하는 체험 영상 및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안전에 대해 생각하고자 추진됐다.

공모기간은 오는 내년 2월 28일 겨울철 기간 동안이며, 참가대상은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주요 내용은 가족과 함께하는 소방안전체험영상을 공모하여 소방서 담당자가 교육영상을 비대면으로 피드백하여 응급상황에 따른 올바른 대처능력을 함양을 위해 실시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119안전체험영상 참가 방식은 가족과 함께 응급상황별 체험 영상을 소방서 담당자 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접수하여 피드백을 통해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도민들이 공감하며 즐길 수 있는 비대면 안전문화 행사 제공을 통해 응급 및 재난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 전남선관위, 음식물 제공받은 유권자에 30배 과태료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전남지역 주민들이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 12명에게 총 11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특정 후보자 측근이 마련한 식사자리에 참석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이들이 제공받은 음식물 가격의 30배에 해당하는 1인당 94만5000원씩 총 1128만6000원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국회의원 후보자 측근 A씨는 지난 3월 선거운동을 위한 식사자리를 마련해 후보자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유권자 12명에게 총 4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남선관위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유권자들에게 총 2563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만취 운전하다 신호대기 차량 추돌 40대 입건

심야시간대 광주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을 들이받은 40대가 검거됐다.

광주광산경찰서는 23일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 등)로 A(4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30분께 광주 광산구 흑석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23)씨를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2%(운전 면허 취소 수치)인 상태로 차량을 몰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기독교병원, 퇴원 환자 가족까지 'n차 전파'

### 관련 감염 사례 10명

광주에서 병원·요양원 관련 집단 감염이 이어지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명 추가돼 누적 환자가 945명으로 늘었다.

23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명이다. 이들은 광주 942~945번째 확진자로 등록돼 격리 병상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광주 942~944번째 확진자는 의료

진과 입·퇴원 환자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기독교병원과 연관성이 있다.

서구 농성동에 사는 광주 943번째 확진자는 최근 기독교병원에서 퇴원했다. 배우자도 감염 사실이 확인돼 942번째 확진자로 분류됐다.

광주 944번째 확진자는 광산구 월곡동에 거주하며, 기독교병원 퇴원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지난 20일 간호조무사(광주 876번째 환자) 이후 기독교병원 관련 코

로나19 확진자는 10명으로 늘었다. 유형별로는 의료진 2명, 환자(퇴원환자 포함) 4명, 가족·지인 4명 등이다.

시 방역당국은 기독교병원 관련 직·간접 접촉자 111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광주 945번째 확진자는 에버그린 요양원 시설 내 감염으로 추정된다. 요양보호 서비스를 받던 입소 환자다.

에버그린 요양원 관련 감염자는 총 25명이다. 이 중 입소 환자는 사망자 1명을 포함해 13명이다. 요양보호사 6



21일 오전 광주 남구 광주기독교병원 서5병동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의료진 등 종사자 전수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명과 이들의 접촉자인 6명도 관련 확진 사례로 분류됐다.

한편 광주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945명이다.

김민정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